

## 제목

철도경영학과 202310285 김민태

### 1. 서론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뉴스, 기사를 보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는 독자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통계들을 보자.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대한민국뿐이었다. 지난 2012년 48만 4천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거의 반이나 줄어들어 지난해 24만 9천 명에 그쳤다.<sup>1)</sup> 이러한 급격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성공했는가에 대하여 필자의 주장을 논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환경의 문제

저출산의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는 대한민국 여성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겠다. 한국 여성인 유인애 씨는 BBC에 "아이를 낳게 되면 나타날 몸의 변화가 두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사교육비,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도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 사회는 모성애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어 도저히 그 기대에 부응할 자신이 없다"면서 "출산을 하면 달려오는 금전적 보상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현금 제공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제공되어야만 '출산율 증가'라는 모두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sup>2)</sup>

#### 2.2. 여성의 사회적 한계

여성이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로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생각을 꺼리는 경향도 많아졌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전년에 이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32.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21.6%),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20.4%)을 꼽았다. 특히 여성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20.4%)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는 비율이 남성(9.2%)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주거지원'이 35.6%로 작년(26.1%)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어 '보육 지원'(22.9%), '경력 단절 예방 지원'(21.1%)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절반 가까이(46%)가 '주거지원'을 선호했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경력 단절 예방 지원'(34%)을 선호했다.<sup>3)</sup>

1) 고우리, 10년째 OECD 꼴찌..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 ikbc, 등록일자 2023.2.22., 접속 2023.5.28.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2220045>

2) 스테판 헤거티, 저출산: 전 세계 출산장려금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bbc뉴스코리아 수정 2020.1.25., 접속 2023.5.28., <https://www.bbc.com/korean/news-51195531>

3) 권안나, 미혼 여성 44.6%, 남성 31.0% "아이 낳지 않을 것", 뉴시스 수정 2022.01.06., 접속 2023.5.28.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105\\_0001714456#\\_PA](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105_0001714456#_PA)

### 3. 반론/재반론

#### 3.1. 반론

우리나라의 현금보조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40조 저출산 분야 중에 현금보조 지원을 5500억으로 끝낸 것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컸을수도 있다. 실제로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정책 관련 예산이 17조 9819억 원으로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OECD 기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금보조 지원 비율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sup>4)</sup>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이 임신, 육아가 아닌 근로조건이라고 나온 통계가 있다. 이렇듯 임신, 육아가 여성 경력단절의 이유가 아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금노동자로 일했던 모든 여성(1,119명, 비혼여성 포함)을 대상으로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조사해봤다. 그랬더니 경력단절의 이유의 1위가 육아나 출산 등이 아닌 '근로조건'(27.5%)으로 나타났다.<sup>5)</sup>

#### 3.2. 재반론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이 금전적 지원에 대해 말하는 것을 한 번 보겠다.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금전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은 ‘폰지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경제적 지원에 매달리는 것은 일시적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16년간 약 2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포괄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콜먼 교수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1970년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회복됐다”며 “그 중심에는 가족 친화적 노동시장 개혁,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sup>6)</sup> 여성의 경력단절 이유중 근로조건이 악화된 이유도 여성의 임신, 육아의 이유가 크다고 본다. 여성의 임신, 육아로 인한 심리적 압박, 현실의 압박을 못 버티고 사표를 낸 경우도 많을 수 있다고 본다.

### 4. 결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부나 정책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저출산에 대하여 정착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본다. 이러한 저출산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문제를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의 생각도 비슷하다. 지난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19~69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출산 장려’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3%로 압도적이었다. 찬성한 응답자(930명)들은 ‘일·생활의 균형’(23.9%) ‘주거 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체계 확립’(14.9%) 차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꼽았다. ‘출산 지원’(13.8%)은 네번째에 그쳤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회나 정부, 지자체들의 ‘패러다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분위기다. 한부모 가정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논란이 단적인 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6일 예산안

4) 이강진, [팩트체크] 저출산 예산 한해 40조원은 현금성 지원?, 수정 2021.09.15., 접속 2023.5.28.,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31>

5) 박찬형, 경력단절 뒤 구직이 힘든 여성...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수정 2019.07.31., 접속 2023.5.2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53164>

6) 곽윤아, "금전적 지원으로 출산 장려? 폰지사기 불과", 수정 2023.05.17., 접속2023.5.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M55RYEH>

합의문에도 ‘저출산 극복’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안팎에서는 저출산을 ‘극복’이 아니라 ‘적응’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7)</sup>

#### 5. 참고문헌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2220045>

<https://www.bbc.com/korean/news-51195531>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105\\_0001714456#\\_PA](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105_0001714456#_PA)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873419.html>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3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53164>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M55RYEH>

---

7) 황예랑, 문제는 ‘삶의 질’인데…정치권은 아직도 ‘출산, 얼마면 되겠니’, 한겨레, 수정 2018-12-07, 접속2023.5.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873419.html>